

현안과 과제

■ 2017년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목 차

■ 2017년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2017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및 기업경영 전망	2
3.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백 흥 기 산업전략본부장 (2072-6228, hkback@hri.co.kr)

신성장연구실 : 안 중 기 선 임 연 구 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7년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 개 요

지난 연말부터 계속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최근 국내 경기는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성장이 건설부문에 많이 의존하며,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미진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회복세에 머물고 있다. 하반기에도 추경 집행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은 경제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적지 않은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이 하반기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영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2017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및 기업경영 전망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기업들은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약 80%에 이르는 응답자가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미국발 불안요인이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44.1%)과 미국의 금리인상(28.4%)이 세계 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았다.

국내 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 국내 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2018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위협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 기업투자 위축, 소비 부진이 지적되었다. 수출이나 고용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경영환경 전망) 환율은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유가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환율은 1,100~1,200원/달러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1,200원/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가는 40~50달러/배럴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연장 등 유가 상승 요인과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등 하락 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후자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많았다.

경제정책 평가와 관련해 추경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상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추경 편성은 하반기 고용, 소비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반수의 기업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2018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0대 국회의 지난 1년 간의 경제 관련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C'로 평가하였다. 'D'나 'F'라고 대답한 기업 비중도 각각 28.0%, 10.0%를 차지했으며, 'A'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규제완화 지속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책 수립 등 체계적 접근과 장기적 실행이 필요한 정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친화적 세제 개편이나 확장적 재정정책 등 경기부양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중이 높았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경제 민주화 정책은 기업 경영활동 및 노사관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계획) 50% 이상 기업들의 상반기 경영실적은 연초에 예상했던 수준을 유지했다.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기업들은 주된 이유로 수출 호조를 언급했다. 반면 경영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하반기 경영계획은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 혹은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수립될 전망이다. 매출과 이익은 상반기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 신규 고용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업투자지수) 투자의욕은 양호했으나 투자여건 개선이 미흡하고 상반기 투자실적이 부진하여 상반기 때보다 소폭 하락했다. 투자의욕은 기존 투자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강했고, 현재보다 경기가 악화되어도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투자여건에 대해 만족하는 기업이 37.6%에 불과했다. 다만 향후 투자여건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긍정적이다. 또한 상반기 투자실적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기업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산업별 지수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금융·전기전자·식음료는 평균을 상회하고, 조선·유통·철강·운송·건설은 평균을 하회한다. 평균을 하회한 업종들은 상회한 업종들에 비해서 투자실적 및 투자여건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였다. 대표적인 주력업종인 자동차와 정유·석유화학은 산업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평균에 근접하는 투자지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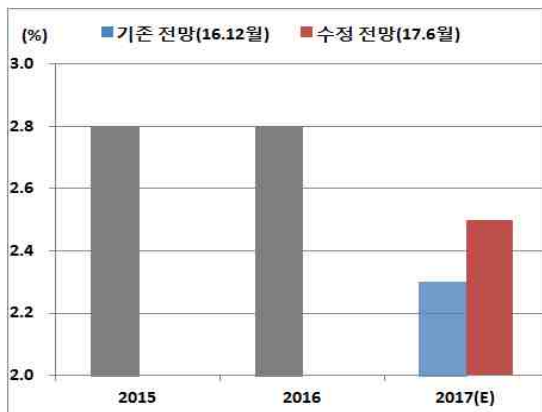
■ 시사점

첫째, 새 정부는 기업 등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대내외 위협요인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하여 주요국의 무역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관련해 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등 새 정부가 마련한 가계 건전성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여 기업친화적 경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증대가 수익성 향상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투자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1. 개요

- 상반기 국내 경기는 반등에 성공했고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불안요인에 노출될 전망
 - 지난 연말부터 지속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최근 국내 경기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회복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
 - 정치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성장이 건설부문에 많이 의존하며,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미진하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회복세¹⁾
 - 하반기에도 추경 집행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금리인상,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적지 않은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
 -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약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경제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전망
 -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
 -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2016년 12월 전망)에서 2.5%로 0.2%p 상향 조정
-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이 하반기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영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실적은 한국은행, 전망은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개요>

	내용
조사 기간	- 2017년 6월 28일~6월 30일(3일간)
조사 대상	- 국내 주요 150개 기업
조사 내용	- 국내외 경제 전망 - 상반기 경영실적 / 하반기 계획 - 하반기 주요 정치·경제·경영 이슈 - 향후 투자 여건 전망
응답 기업	- 102개 기업(응답률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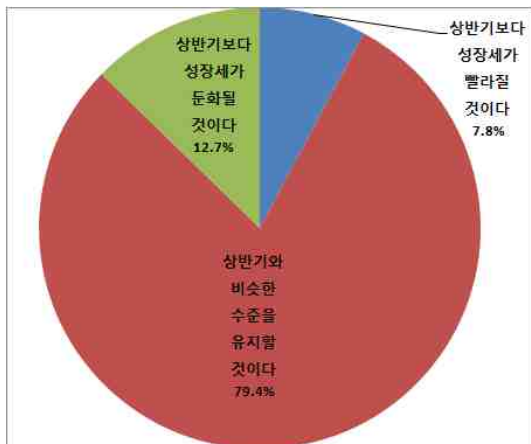
1)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여전히 불안한 회복세, 2016년보다 낮은 2.5%에 그칠 전망”, 경제주평(17-24), 2017.06.16 참조.

2. 2017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및 기업경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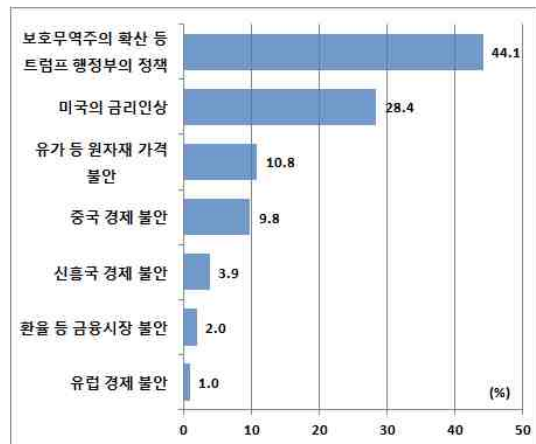
1) 2017년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기업들은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발 불안요인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음
 - 하반기 세계 경제 : 대다수의 기업들은 2017년 하반기 세계 경제가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
 - 2017년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79.4%로 가장 많음
 -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12.7%,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응답 비중은 7.8%
 - 세계 경제 불안요인 : 많은 기업들이 미국발 불안요인이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우려
 -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44.1%)’, ‘미국의 금리인상(28.4%)’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음
 -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불안(10.8%)’, ‘중국 경제 불안(9.8%)’, ‘신흥국 경제 불안(3.9%)’이 다음 순서

< 2017년 하반기 세계 경제 전망 >



< 2017년 하반기 세계 경제 불안요인 >



○ (국내 경제) 국내 경제는 점차 회복되어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계부채 증가, 기업투자 위축, 소비 부진 등 위협요인이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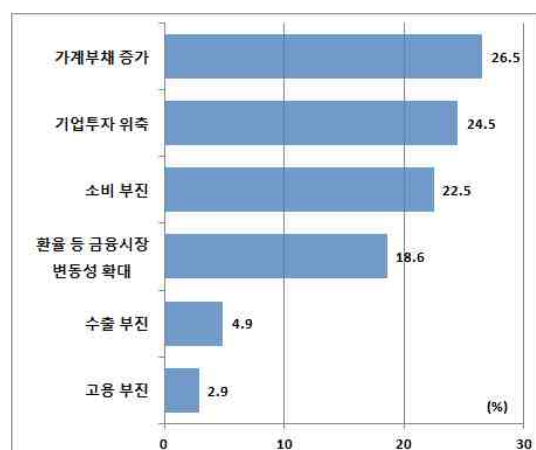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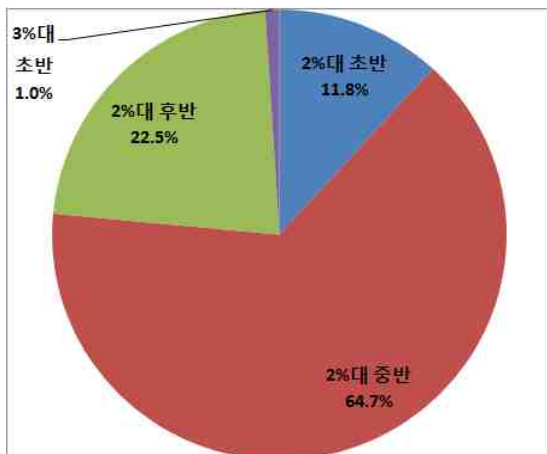
- 하반기 국내 경제 : 하반기에 경제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전망

- 하반기 국내 경제에 대해 '회복세 점차 확대(58.8%)', '일시적으로 회복세 주춤(36.3%)', '침체 국면 재진입(4.9%)'이라고 응답
- 2017년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이라고 전망한 기업이 64.7%이고, 다음으로 '2%대 후반'이 22.5%, '2%대 초반'이 11.8%
-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적어도 2018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2018년 상반기 32.7%, 하반기 41.6%, 2019년 상반기 10.9%, 하반기 이후 8.9%)²⁾

- 국내 경제 위협요인 : 하반기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26.5%)'와 '기업투자 위축(24.5%)', '소비 부진(22.5%)'을 지적

-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는 위협요인은 없으나, 가계부채 증가, 기업투자 위축, 소비 부진이 주요 위협요인으로 거의 비슷한 응답 비중을 차지
-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18.6%)'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
- 한편 주요 기업들은 '수출 부진(4.9%)'이나 '고용 부진(2.9%)'이 하반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음

<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 2017년 하반기 국내 경제 위협요인 >



2) 본격적인 회복이 2017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9% 수준임.

2) 하반기 기업 경영환경 전망

○ (대외 환경)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유가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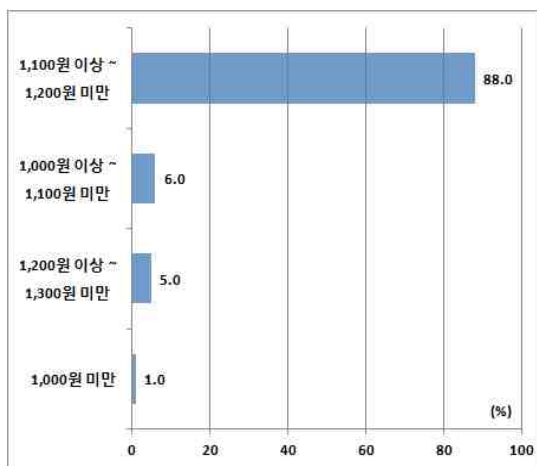
- 환율 전망 : 환율은 상반기와 비슷한 '1,100원 이상~1,200원 미만'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³⁾

- 하반기 평균 환율이 '1,100원 이상~1,200원 미만'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88.0%)이 대부분을 차지
- 주요 기업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어 환율 상승 요인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평균 1,2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기업들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1,100원 이상~1,200원 미만'이라는 응답 비중이 53.7%, '1,000원 이상~1,1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1.6% 비중

- 유가 전망 : 하반기 평균 유가는 상반기보다 소폭 하락한 '40달러 이상~50달러 미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⁴⁾

- 유가는 '40~50달러'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의견이 50.5%, '50~60달러'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39.6% 수준
-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연장 등 유가 상승 요인과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등 하락 요인이 공존하는 가운데, 후자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한 기업이 많음

< 2017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전망 >



< 2017년 하반기 유가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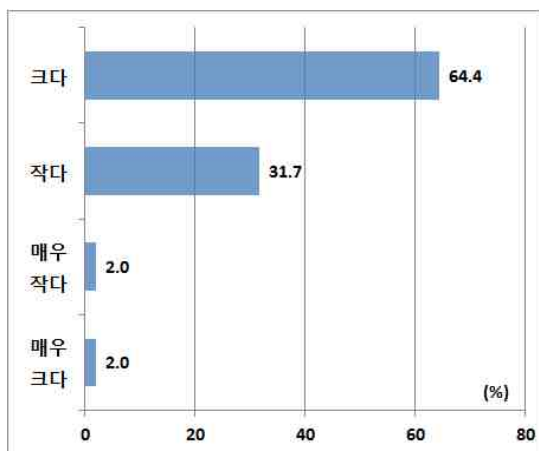
유가(달러/배럴)	응답 비중(%)
30이상 ~ 40미만	6.9
40이상 ~ 50미만	50.5
50이상 ~ 60미만	39.6
60이상 ~ 70미만	3.0

3) 2017년 상반기 평균 환율은 약 1,140원/달러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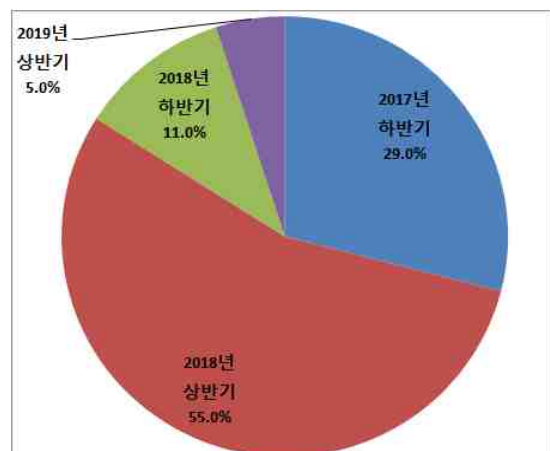
4) 2017년 상반기 평균 유가(WTI 기준)는 약 50달러/배럴 수준임.

- (경제정책 평가) 기업들은 추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상반기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 추경 편성 효과 : 정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하반기 고용, 소비 등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
 - 추경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64.4%, 작을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31.7%를 기록
 - 반면 추경 편성의 영향이 '매우 크거나(2.0%)', '매우 작을 것(2.0%)'이라고 예상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함
 - 금리인상 시점 :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반수의 기업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2018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2018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55.0%, '2017년 하반기'라는 응답이 29.0%
 - '2018년 하반기'에 인상할 것이라는 응답은 11.0%, '2019년 상반기'라는 응답은 5.0%를 기록
 - 경제입법 활동 : 20대 국회의 지난 1년 간의 경제 관련 입법 활동에 대해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C'로 평가
 - 'C'라고 응답한 기업이 41.0%로 가장 많고, 'D'는 28.0%, 'B'는 21%, 'F'는 10.0%이며 'A'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음

< 추경이 경제에 미칠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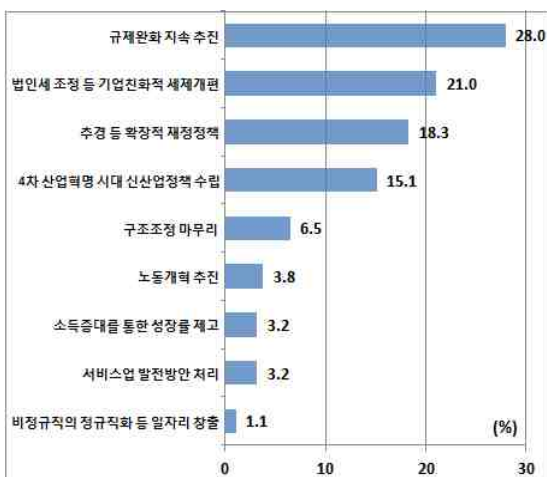
< 기준금리 인상 시점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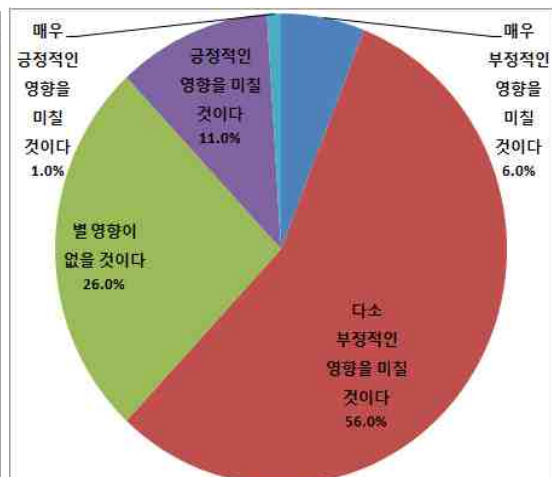
○ (경제·경영 이슈) 새 정부에 대해 규제완화 지속 추진, 경기부양 정책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경제 민주화 정책 강화는 기업 경영 및 노사관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새 정부 경제정책 : 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규제완화 지속 추진, 법인세 조정 등 기업친화적 세제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책 수립 등이 지적
 - ‘규제완화 지속 추진(28.0%)’, ‘4차 산업혁명을 감안한 산업정책 수립(15.1%)’ 등 정부의 체계적 접근과 장기적 실행이 필요한 정책이 높은 비중을 차지
 - 또한 ‘법인세 조정 등 기업친화적 세제 개편(21.0%)’이나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18.3%)’ 등 경기부양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중이 높음
- 경제 민주화 : 일감몰아주기 체제 강화 등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기업 경영 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56.0%를 차지
 -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26.0%, ‘공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 비중은 11.0%,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6.0%를 나타냄
- 노사관계 :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다소 악화될 것이다(52.0%)’라고 예상
 -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 비중이 27.0%이고, ‘노사관계가 다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15.0% 수준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



< 경제 민주화 정책 영향 >



주 : 2개 이내 복수응답.

3)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와 하반기 경영계획

○ (상반기 경영실적) 50% 이상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예상 수준을 유지했고, 연초에 설정한 예상 실적을 상회한 기업의 주요 원인은 수출 호조, 하회한 기업은 내수 부진 때문

- 상반기 경영실적 : 절반 이상 기업들의 상반기 경영실적은 연초에 예상했던 수준을 유지

· 예상을 하회(‘예상에 다소 못 미쳤다’ 18.6%, ‘예상보다 매우 나빴다’ 7.8%)한 기업 비중은 26.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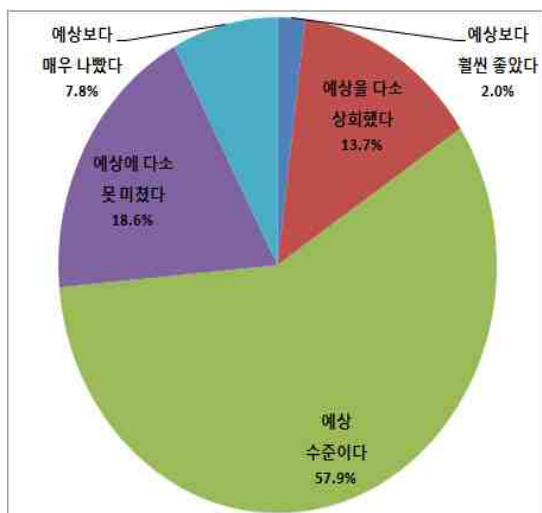
· 반면 예상을 상회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15.7% 수준(‘예상을 다소 상회했다’ 13.7%,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2.0%)

- 실적이 예상을 상회 혹은 하회한 이유 : 경영실적이 예상을 하회한 기업의 주요 원인은 내수 부진,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기업은 수출 호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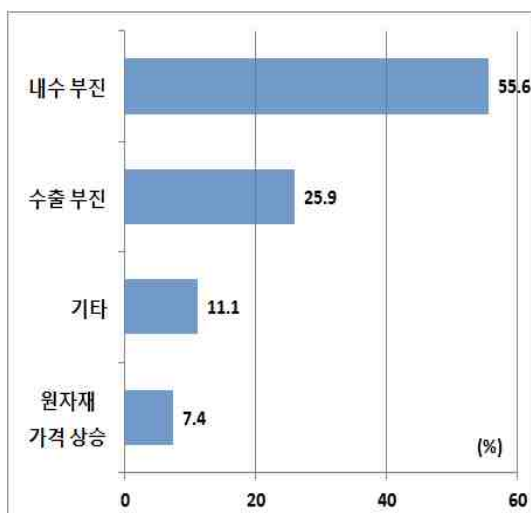
·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주된 이유는 ‘내수 부진’ 55.6%, ‘수출 부진’ 25.9%, ‘원자재 가격 상승’ 7.4% 순서임

·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이유는 ‘수출 호조’ 31.3%, ‘내수 호조’ 18.8%, ‘비용절감’ 18.8%, ‘원자재 가격 하락’ 6.3%, ‘환율·금리 효과’ 6.3%, ‘기타’ 18.8%

< 2017년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



<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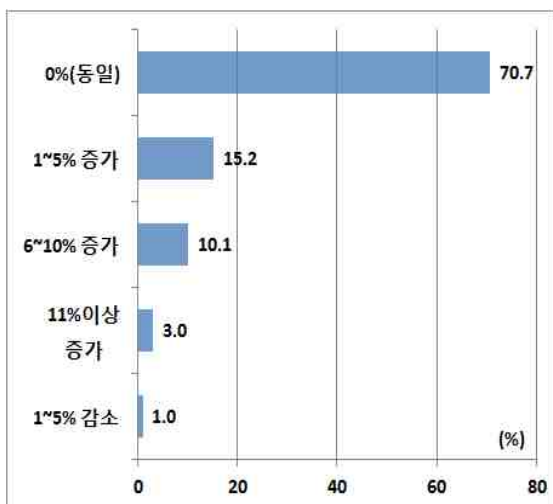
○ (하반기 경영계획) 주요 기업들은 2017년 하반기에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계획을 수립할 전망

- 하반기 경영목표 : 매출과 이익은 상반기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는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
 - 매출과 이익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18.0%, 29.3%인 반면, 1% 이상 증가를 예상하는 비중이 각각 77.0%, 56.6% 수준
 - 상반기와 동일 수준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67.0%, 69.7%를 기록
- 신규 고용 : 약 70%에 이르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하반기 신규 고용 규모를 상반기와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
 - '1~5% 증가'할 계획인 기업은 15.2%, '6~10% 증가'할 예정인 기업은 10.1%이고, '1~5% 감소'할 계획인 기업은 1.0%에 해당
- 자금 사정 : 기업들의 하반기 자금 사정은 상반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76.5%)으로 예상
 - '호전될 것이다'라는 응답 비중이 13.7%, '다소 악화'되거나,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9%, 3.9%를 차지

< 하반기 경영목표(상반기 대비) >

	(%)			
	매출	설비투자	R&D	영업이익
11%이상 증가	13.0	5.0	3.0	9.1
6~10% 증가	30.0	3.0	4.0	12.1
1~5% 증가	34.0	20.0	22.2	35.4
0% (동일)	18.0	67.0	69.7	29.3
1~5% 감소	3.0	3.0	1.0	10.1
6~10% 감소	1.0	2.0	-	2.0
11%이상 감소	1.0	-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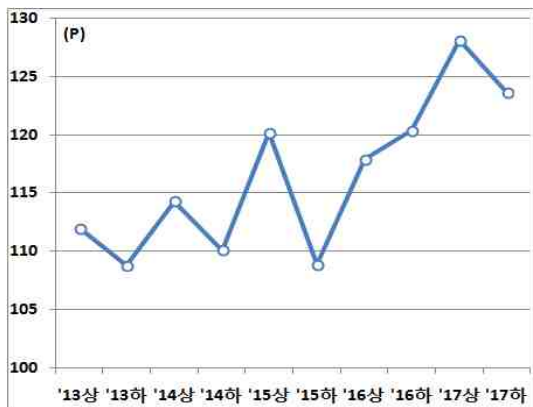
< 하반기 신규 고용(상반기 대비) >



4) 하반기 기업투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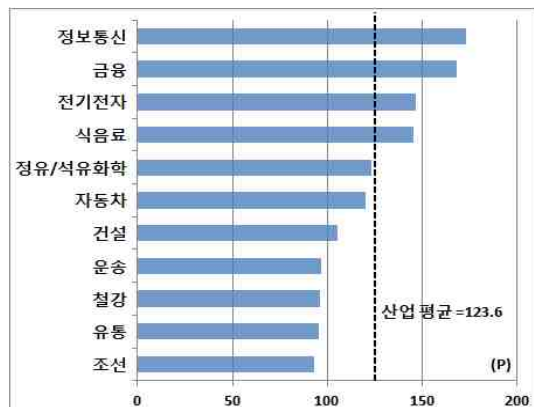
- (평가) 상반기 투자실적이 부진하고 투자여건 개선이 미흡하여 소폭 하락했고, 조선·철강·운송 등이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전산업 : 투자의욕은 양호했으나 투자여건 개선이 미흡하고, 상반기 투자실적이 부진하여 상반기 때보다 소폭 하락(128.2 → 123.6)
 - 상반기 투자실적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기업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45.1%)으로 조사됨
 - 그러나 투자 대비 성과는 양호(64.7%)했고, 향후에도 투자한 만큼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80.2%)
 - 투자의욕과 관련해 기존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강하고(88.2%), 현재보다 경기가 악화되어도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의견이 68.3%에 이룸
 - 수익이 기대된다면 리스크가 크더라도 투자하겠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47.5%
 - 현재 투자여건에 대해 만족하는 기업은 37.6%에 불과하나, 향후 투자여건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긍정적인(57.6%)
 - 산업별 : 정보통신·금융·전기전자·식음료는 종합지수가 산업 평균을 상회하고, 조선·유통·철강·운송·건설은 평균을 하회
 - 평균을 하회한 업종들은 평균을 상회한 업종들에 비해서, 투자실적 및 투자여건에 대한 평가가 저조
 - 한편 대표적인 주력업종인 자동차와 정유/석유화학은 산업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평균에 근접하는 투자지수를 기록

< 기업투자지수 추이 >



주 : 최소 0, 최대 200이고, 기준값은 100.

< 산업별 기업투자지수 >



3. 시사점

- 시장과의 의사소통 강화,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투자 활성화 정책 지속 추진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할 필요
 - 첫째, 새 정부는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정부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시행될 경제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 경제 민주화 정책이 경영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
 - 단기 경기부양책 및 장기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
 - 둘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가계부채 증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통상 마찰이 늘어나고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무역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금리인상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로의 과급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
 - 새 정부가 가계부문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정책(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
 - 셋째,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여 기업친화적 경제 여건을 조성
 -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여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자발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
 - 기업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여 투자 증가가 수익성 향상을 통해 고용 확대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다시 투자 확대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

안중기 선임연구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
 홍유립 연구위원 (2072-6243, ylhong@hri.co.kr)